

## 현대부르조아《런대경제체제론》자들의 《런대매체의 기능》에 대한 설교의 반동성

류 정 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학계에서는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조아경제리론의 반동성에 대한 문제도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47페이지)

오늘 남조선의 사이비학자들은 그 무슨 《개량》의 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경제체제》인 《런대경제체제》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식민지에속경제인 남조선경제를 그대로 두고서도 리상사회가 실현될수 있는듯이 떠들어대면서 그것을 리론적으로 합리화하는 《런대경제체제론》을 조작하고 선전하고있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은 인간이 《런대》를 위하여 자본주의사회에 범람하는 주식과는 다른 《런대매체》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런대부문》의 기능과 역할에 의하여 마치도 자본주의사회를 그대로 두고도 인류의 리상사회를 실현할수 있는듯이 설교하고있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은 《런대매체》에 의한 주식제도의 《변혁》이 경제체제를 전반적으로 《변혁》시키게 된다고 하면서 《런대매체의 기능》에 대하여 3가지로 설교하였다. 이자들은 지금까지의 화폐가 《존재적가치매체》이라면 《런대매체》는 사람들사이의 《호상협력》을 실현해주는 《런대》의 매개체로서 《경제적, 조직적, 정치적기능》을 수행한다고 설교하고있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의 《런대매체의 기능》에 대한 설교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근로자들이 《런대매체》를 통한 저축을 통하여 《생존을 위한 준비금》을 마련할수 있는듯이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있는 데 있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은 《런대매체의 경제적기능》을 《년금청구권》이라고 떠벌이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년금청구권》이란 《런대매체》를 구입한 소유자가 은퇴후에도 일정한 자금을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들은 저축된 《런대매체》의 가치는 물가수준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가치를 가지며 《런대매체》를 구입한 사람은 그 가치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실업년금》, 《년로후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런대매체》를 통한 저축은 《년금지급》, 미래의 《생존을 위한 준비금》이라고 하고있다.

그들은 근로인민대중이 《런대매체》를 소유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서 현재는 물론 은퇴후에도 각종 사회적혜택을 받을수 있는듯이 떠벌이고있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이 떠벌이는 《런대매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허황한것이다.

《가치매체》란 일정한 크기의 가치를 반영하고있는 증권이나 가치물을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런대매체》란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유가증권에 지나지 않는다.

유가증권은 임의로 만들어낼수 있는 휴지가 아니다. 유가증권은 객관적인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만들어지는것으로서 어느 개별적사람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없앨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 누가 새로운 경제관계를 반영하지도 않는 《새로운 가치매체》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것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사회적인정을 받을수 없게 된다.

《련대경제체제론》자들이 떠벌이는 《련대매체》의 가치도 불변하는 가치로 될수 없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치매체》가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자본가들의 배를 더욱 비대하게 해주는 착취수단으로서만 의의가 있을 뿐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가치크기는 가치법칙의 무제한한 작용 밑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가치매체》인 《련대매체》는 그 어떤 새로운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주식과 같은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산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무정부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언제 파산당할지 모르는 한심한 상태에 있다.

1997년에 남조선에 들이닥친 금융위기와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하여 과국적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남조선경제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자기의것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절름발이경제, 기형적인 경제제도에서 그 무슨 《가치매체》의 불변성을 론한다는것자체가 어리석은 망상이다.

《련대경제체제론》자들이 떠벌이는 《련대매체》를 통한 저축은 미래의 《생존을 위한 준비금》으로 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이 고용로동자들의 로동을 착취하여 잉여가치의 전화된 형태로 리운을 획득한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인 남조선사회에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련대매체》를 통한 저축이란 있을수 없다.

《련대경제체제론》자들의 《련대매체의 기능》에 대한 설교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련대매체》에 의하여 경제생활에서 계급들사이의 호상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요구와 리익이 실현될수 있는듯이 주장함으로써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을 무마시키고있는데 있다.

《련대경제체제론》자들은 《련대매체의 조직적기능》을 주식의 기능이라고 하고있다. 그들은 기업의 견지에서 볼 때 《련대매체》가 주식과 동일하다고 하면서 《련대경제체제》에서는 주식이 아니라 《련대매체》라는 개념을 사용하므로 주식회사를 《련대기업》으로, 주주총회를 《화백회의》(주주들의 조화로운 회의)라고 부른다고 하고있다.

그들은 《화백회의》의 의사결정도 주주총회의 1주식 1표제도와 마찬가지로 1《련대매체》 1표제도에 의하여 내려지므로 로동자가 《련대기업》의 경영에 참가하려면 그들이 소유한 《련대매체》를 자기들의 기업에 신탁하여야 한다고 설교하고있다. 계속하여 그들은 《련대기업》에서는 기업의 성과에 따르는 《련대매체》의 재평가에 의하여 그 리익을 전체 근로인민대중이 향유하고 그 기준은 자본세와 회사내보유 등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고 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기업운영에서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의사를 표명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가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자신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그러

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있지 못한것으로 하여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그 대상으로만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사회의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생존권마저 깡그리 말살당하고있다. 남조선사회에서 《런대매체》를 소유한 근로인민대중이 1《런대매체》1표제도에 의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가한다는것은 기만적인 꾀변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모든 법조항들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는 관계없이 한줌도 안되는 독점자본가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런대매체》의 재평가로 인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대하여 떠벌이는것은 그들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인것이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의 《런대매체의 기능》에 대한 설교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근로자들이 《런대자본》의 배분과 경제정책의 결정에 대한 《투표권》, 《결의권》을 가지게 되는듯이 설교함으로써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그들의 투쟁을 무마시키고있는데 있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은 《런대매체의 정치적기능》을 《런대자본의 공유지분권》이라고 떠벌이고있다. 이들이 말하는 《런대자본의 공유지분권》은 사회의 전체 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각각 가지게 되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그들은 대중에게 《런대매체》를 판매하여 마련된 화폐자본과 자본세, 소유소득을 흡수한 《런대부문》이 그 사회전체의 자본을 다시 시장에 배분하는데 이렇게 집결된 자본이 《런대자본》이며 이러한 《런대자본》은 본질적으로 《런대매체》를 구입한 대중의 《공동소유》로 된다고 설교하고있다. 계속하여 그들은 《런대매체》는 주식과는 다른 정치적기능을 가진다고 하면서 그것은 《런대부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화백회의》에서의 《결의권》으로 된다고 설교하고있다.

그들은 근로인민대중이 《런대매체》를 구입하면 그들이 사회전체적으로 이루어진 화폐자본의 《공동소유자》로서 그 일부를 분배받을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경제정책의 결정에도 참가할수 있는듯이 떠벌이고있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전체적인 《런대자본》은 《런대매체》를 구입한 대중의 공동소유로 될수 없다.

경제생활에서의 소유권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물건을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그들의 말대로 《런대매체》를 구입한 모든 사람들이 《런대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한 《공동소유자》이라면 그들은 응당 그에 대한 점유와 리용, 처분을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였기때문에 그 어떤 권한도 없으며 오직 생존을 위하여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된다.

남조선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정치적자유와 경제적권리도 행사하지 못할뿐 아니라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있다. 그자들이 떠벌이는 《런대자본》이 《런대매체》를 구입한 근로인민대중의 공동소유로 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따라서 그들이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런대매체》가 《런대부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는 《화백회의》에서 근로인민대중의 《결의권》을 표시해줄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모든 정책은 철두철미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쥔 극소수의 독점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익만을 반영하여 작성집행되고있다. 더우기 자기의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남조선에서 경제정책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계하게 오직 미국상전의 요구대로만 작성집행되고있다.

《런대부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는 《화백회의》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결의권》을 가진다는 설교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무마시켜보려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책동의 산물이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류포되고있는 《런대경제체제론》의 반동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경제리론의 순결성과 혁명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여야 할것이다.